

# 용도별 부채비율과 복지태도:

저소득층과 일반가구의 용도별 부채 비율 차이 및 가구유형과 용도별 부채 비율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양종민<sup>1</sup>

<sup>1</sup> 인하대학교

## 초 록

본 연구는 금융화된 복지국가 환경에서 가계부채의 용도별 비율과 소득계층 간 상호작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부채 용도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은 생계비·의료비 등 소비성 부채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주택자금 등 투자성 부채 비중이 높았다. 이어 가구유형과 부채 용도 비율의 상호작용이 복지지출 확대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성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의 사회보험형 및 재분배형 복지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강화된 반면, 투자성 부채 비율은 전반적 복지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의료비 부채 비율은 전 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장애인 생활지원에서만 일반가구 지지가 소폭 증가하는 역패턴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부채의 성격과 용도가 복지수요 형성의 핵심 경로임을 보여주며, 부채 안전망 구축과 계층별 맞춤형 위험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 용어:** 가계부채 용도, 저소득층, 소비성 부채, 투자성 부채, 복지태도

##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저소득층은 금융화된 복지국가 환경에서 주로 생계비·의료비 등 소비성 부채에 의존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주택자금 등 투자성 부채에 주로 의존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부채의 총규모에만 집중해왔고, 부채의 용도에 따라 개인의 복지태도 형성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부채 용도별 비율의 차이를 파악하고, 가구유형과 부채 용도 비율의 상호작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복지패널 자료 분석 결과, 저소득층은 생계비·의료비 등 소비성 부채 비율이 높은 반면, 일반가구는 주택자금 등 투자성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비성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의 사회보험형 및 재분배형 복지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생활비 부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책금융 기관의 저금리 대출 한도 확대, 의료비 부채 선지급 시스템 도입, 소득계층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연체 데이터와 복지 부서의 정보를 연계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의 부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보험으로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A8007583).

- 투 고 일: 2025. 08. 18.
- 수 정 일: 2025. 12. 31.
- 게재확정일: 2026. 01. 29.

## I. 문제 제기

Esping-Andersen(1999, p. 32)은 복지국가의 핵심적 역할은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집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평등주의적 결과는 이러한 위험 관리의 파생적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복지국가는 어떤 위험을,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집합적으로 분산시킬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적 형태를 취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빈곤, 소득 분배, 경제적 기회에 대한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전까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Golden Age)'로 불리며, 국가가 빈곤 구호, 사회부조, 재분배 정책을 통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실업·질병·은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여 개인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와 경제위기 이후 포디즘 제조경제에서 유연한 지식경제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변화가 개인들의 고용 형태와 생애 경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되었다(Wiedemann, 2021). 이 과정에서 일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사회소비 중심에서 사회투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내재적 유연화(embedded flexibilization)" 접근을 채택한 반면(Thelen, 2014), 다른 국가들에서는 복지제도가 점점 더 개인들의 실제 재정 상황과 괴리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더 빈번해진 고용 중단, 증가하는 소득 변동성, 그리고 높은 생활비 부담은 개인에게 새로운 재정적 위험을 안겼고, 복지국가의 축소와 정책 표류(drift)로 인한 사회정책 지원의 약화는 사회적 위험뿐 아니라 사회적 기회의 비용까지 정부에서 개인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Wallace, 2002; Finlayson, 2009; Hacker, 2019).

이러한 가운데 개인은 저축과 신용과 같은 사적 대응 전략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everyday life)가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과 부채가 가계의 일상적 활동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침투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Martin, 2002; Langley, 2008; Bobek et al., 2023). 이 과정에서 국가는 가계의 금융 참여를 단순히 허용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개인의 사적 금융 전략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Finlayson, 2009).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차입활동이 가계의 핵심 활동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신용 접근에 대한 규제와 같은 금융정책이 사실상 사회정책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이 '시장 시민권(market citizenship)' 또는 '금융적 시민권(financial citizenship)'으로 대체되면서, 개인의 사회적 보장이 시장 기반의 금융 참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Bobek et al., 2023, p. 2239).

그러나 이러한 신용에 대한 접근은 계층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부채가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 사례를 연구한 Lin & Neely(2020)에 따르면 부채에 대한 계층별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소득층의 경우 대규모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적 어려움의 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신용 접근성과 자산 구축 잠재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부채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한다. 반면 중산층은 금융화 시대에 순자산 대비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어 높은 부채 부담을 경험하며, 적은 저축으로 인해 한 번의 급여 중단이나 의료비 지출로도 주택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저소득 가구는 주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며, 접근 가능한 신용도 높은 비용을 수반하여 이들의 재정 건전성에 파괴적인 부담을 가한다.

한국에서도 소득 계층별로 부채의 목적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노대명 외(2017, p. 174)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소득 1분위와 2분위는 신용대출에서 생활비와 보증금의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은 반면, 5분위의 경우 거주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 동일한 자료의 가장 최근 데이터를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2024)의 연구에서도 저소득층의 신규 차입 가구 비중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투자 목적보다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비 목적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계부채의 용도별 차이와 소득계층별 차별적 영향을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존 연구들이 가계부채의 총규모나 단순 부채비율에 집중해 온 반면, 부채의 용도에 따른 위험도와 복지수요의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는 분석적·정책적으로 중대한 공백을 만든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일반가구가 동일한 70%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생계비·의료비 등 생존형 부채에 비중이 집중된 반면 일반가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루므로, 가구가 직면한 경제적 위험과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전혀 다르다(김수현, 황설웅, 2023). 그러나 단순 부채비율만으로는 이러한 위험도의 차이를 포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채가 실제로 복지수요 형성에 미치는 메커니즘의 차별성을 규명하기 어렵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현재의 거시건전성 규제가 가계부채 총규모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생존형 부채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면, 일반가구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므로, 부채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의 경제적 지위와 부채 용도 비율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단순히 분석의 차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의 용도별·계층별 차별적 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위험 관리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지위와 부채 용도 비율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단순히 부채 분석의 차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이유에서 필수적이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Wiedemann(2021)이 제시한 "부채-위험(debt-as-risk)" 메커니즘이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음을 규명해야 한다. 소비부채가 미래 소득 불확실성을 높여 사회보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투자부채는 현재 자산에 기반한 신용이므로 위험 인식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려면, 저소득층과 일반가구별로 부채 용도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야 한다. 둘째, 분석적 차원에서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 저소득층과 일반가구의 부채 용도별 구성이 정말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복지태도 형성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부채 종류별 맞춤형 개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생존형 부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과 자산형성형 부채를 활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해 동일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부채 용도 비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가구의 경제적 지위와 부채 용도 비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복지태도<sup>1)</sup>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부채의 용도별·계층별 차별적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소비부채와 투자부채가 복지정책 선호에 미치는 상반된 메커니즘을 실증하고, 저소득층의 생존형 부채 의존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며, 금융화된 복지국가에서의 위험 관리 전략을 재설계하기 위한 이론적·실증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복지태도는 정부의 사회복지 역할과 지출 규모에 대한 개인의 규범적 판단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초과하여 개인의 행동 의지와 결합된 평가적 반응으로, 신념·감정·행동 의도의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안상훈 외, 2021). 특히 본 연구의 측정 항목인 "정부가 복지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는가"는 단순히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특정 정책을 호불호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자원의 배분에 대한 개인의 규범적 입장과 그에 기초한 행동 성향을 동시에 포착한다(김영순, 여유진, 2011). 복지태도와 복지인식의 개념적 구분은 분석적 유용성을 높인다(안상훈 외, 2021). 이민호(2021)에 따르면, 복지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적 반응으로서 선호도 수준을 넘어 행동적 의도를 포괄한다. 따라서 복지 확대, 증세, 소득재분배와 같은 다양한 정책 사안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할 때, 태도 개념이 더욱 적합하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복지국가와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의 흐름

복지국가와 부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계부채의 증가가 복지국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rouch(2009)가 제시한 '민간 주도 케인즈주의(Privatised Keynesianism)' 개념에 따르면, 전통적인 공공부채를 통한 경제 안정화 대신 가계부채가 가구의 구매력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소비자금융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가 사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다(Crouch, 2009; Krippner, 2012). 포스트 포디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남성 가장 중심의 안정적 고용과 포괄적 복지시스템이 약화되면서, 가계는 유연한 고용형태와 단편화된 생애경로에 적응하기 위해 복합적인 생존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Wallace, 2002). 이러한 변화는 금융기법의 발달로 금융기관들이 가계에 대한 막대한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어(Fligstein & Goldstein, 2015), 연금, 보험, 교육, 건강 등 집합재 제공의 책임이 국가에서 개별 가계로 이전되는 현상을 초래했다(Wallace, 2002).

한국의 경우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복지예산을 크게 늘려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공공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민간 복지 수단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조기퇴직 증가, 실질임금 정체 등 사회적 위험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적 복지보다 개인의 부채 조달이 가계의 주요 대응책으로 자리 잡았다(김도균, 2018, pp. 213-214). 국가가 세금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복지급여는 소득 하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고, 결과적으로 저축이 줄고 부채 의존이 심화되었다. 이 같은 구조는 가계가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메우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복지국가의 보호기능이 개인화·금융화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도 빠르게 팽창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채, 가계부채가 사실상 새로운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용시장(credit market)은 전통적 사회복지 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자원의 재분배, 금융 유동성 제공, 그리고 개인투자 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용시장은 차입자가 미래 소득을 현재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에 따른 자원 재분배를 수행한다. 둘째, 신용카드, 은행 대출, 급여일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금융 수단을 통해 가계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지출을 뒷받침하는 유동성 역할을 한다. 셋째,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인적 자본과 금융자산에 대한 개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장기적 복지 욕구를 지원한다(Wiedemann, 2021, p. 8). 그러나 신용시장 기능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식은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은 부채를 투자·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중산층은 순자산 대비 과도한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저소득층은 높은 금리의 신용에 한정적으로 접근해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된다는(Lin & Neely, 2020).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최하위 소득 1.2분위 가구는 주로 생활비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한 반면, 최고 소득 5분위 가구는 주택 구입과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노대명 외, 2017; 현대경제연구원, 2024). 김수현, 황설웅(2023)의 한국노동패널(2004-2021) 분석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었는데, 주택마련을 위한 신규대출 건수는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더 증가한 반면, 최하위 분위 가계의 경우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건수는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출 규제로 인하여 소득이 낮은 가계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부채도 증가시키기 어려운 반면, 현행 거시건전성 규제 하에서 가계부채는 소득이 높은 가계에게 주택에 대한 레버리지 취득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금융자산 취득을 위한 신규부채 발생 시 5분위

가계에만 유의한 가치분소득 증가 효과가 있으며 여타 가계의 경우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어, 가계부채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는 단순한 금융 지표 이상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지니며, 복지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복지태도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부채 규모와 양상에 집중해 왔을 뿐, 계층별 부채 활용이 복지정책 수용과 복지태도에 어떠한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특히 동일한 정책 환경에서도 부채 목적에 따라 위험 인식과 제도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복지정책 설계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부채 용도 비율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부채 용도 비율이 가구 유형과 상호작용하여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계층별 부채 활용 양상이 복지정책 수용과 개인의 복지 인식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가계부채와 복지태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의 흐름

가계부채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에 대해 우선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가정해볼 수 있다(Wiedemann, 2021, pp. 205-207). 첫째, 신용시장의 보험효과(insurance effect)로서, 신용 접근성 확대는 소득 충격을 자가보험(self-insure)으로 흡수하게 해 공적 사회보험 수요를 감소시키며, 신용한도를 활용한 소비 여력 확대는 개인의 경제 안정감과 부에 대한 과대 인식을 통해 사회보험 필요성을 낮춘다. 둘째, 신용시장의 사유화 효과(privatization effect)로서, 이는 부채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사유화한다는 점에 기반한다. 투자부채(investment debt)를 활용하면 개인은 공적 복지 대신 사적 자원을 통해 교육, 주택, 경력 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유화하면서 복지국가로부터 이탈(opt-out)하므로 사회보험 선호가 약화된다. 반면, 소비부채(consumption debt)의 경우 부채 상환을 위해 안정적 소득이 필수적이므로, 채무자가 미래 소득 손실로 인한 상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강력한 사회보험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9개국 비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무담보부채(소비부채)는 사회보험 지지를 증가시키는 반면 주택담보대출(투자부채)은 사회보험 지지를 감소시키는 상반된 효과가 확인되었다(Wiedemann, 2021, pp. 220-222). 이러한 부채-복지태도 관계는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포괄적 복지국가인 덴마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 복지체제의 조절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Wiedemann(2022)은 미국 주별 실업보험 대체율과 가계부채 자료를 분석하여, 실업보험 혜택이 약한 주에서 실업 경험 가구의 무담보부채가 더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부채 수준이 높아질수록, 특히 공적 복지가 취약한 주일수록 복지지출 확대 지지가 강해지는 효과도 발견되었다. 이는 부채가 미래 소득 손실 위험을 높인다고 인식한 시민들이 더 강한 사회안전망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부채-위험(debt-as-risk)' 관점은, 복지 축소가 가계의 사적 부채 의존을 심화시키고 다시 복지 확대 압력으로 되돌아온다는 정책 피드백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부채와 복지태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항기, 권혁용(2017)은 한국복지패널(2006-2013)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비율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일수록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를 발견하였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의 연체 경험이 있는 개인들이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재분배태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부채 부담이 복지정책 선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16개국 비교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순자산(자산-부채)이 낮을수록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는 점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양종민(2022)은 잠재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사회보험, 재분배, 증세에 대한 복지인식이 ‘전방위 찬성형’, ‘보험·재분배 찬성·증세 반대형’, ‘보험·재분배 찬성·증세 유보형’의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했다.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보험 기능과 재분배는 찬성하되 증세는 반대’하는 유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반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전방위 찬성’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공적 복지 기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계의 부채 부담이 국가의 사회보험과 재분배 확대를 더 강하게 요구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김지원, 채황석(2025)은 서울청년패널 2차년도(2022)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서울시 청년정책 이용 의향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들은 자가 소유 여부가 부채 비율과 정책 이용 의향 간 관계를 조절하며,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일수록 부채가 정책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을 밝혀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20대 집단에서만 부채와 자가 소유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30대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세대별 차이를 시사했다. 따라서 이들은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주거 안정성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소비부채가 사회보험 지지를 강화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이를 약화시키는 이중효과가 관찰되었으며, 국내 분석에서는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재분배 정책 지지를 상승시키는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가 실증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부채 용도별 비율의 체계적 차이와, 가구 유형과 부채 용도 비율 간 상호작용 효과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부채 용도 비율 차이를 분석하고, 부채 용도 비율이 가구 유형과 상호작용하여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계층별 부채 활용 양상이 복지정책 수용 및 개인의 복지 인식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 데이터는 2006년 1차년도부터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구축된 국내 최대 규모의 패널로서 저소득가구에서 표본의 절반 정도를 표집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그동안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특화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왕원 외, 2016; 이재경 외, 2016; 이래혁, 이재경, 2018). 한국복지패널은 가계부채에 대한 다양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복지태도에 대한 부가조사가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9년(14차)과 2022년(17차)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부채 용도 비율과 복지태도에 대한 부가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sup>2)</sup> 이러한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부채 활용 양상의 차이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부채 용도 비율의 차이와 가구유형과 부채 용도 비율 간 상호작용이 복지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과 2022년 데이터를 결합한 통합 회귀분석(pooled

2) 전체 응답자 중 부채가 있는 응답자만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부채 용도별 비율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부채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부채 용도 비율을 산출할 수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채 활용 양상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2019년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여 연도 더미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시계열 자료의 기간 효과를 통제하였으며, 복지태도의 시계열 변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였다(이철승 외, 2018; 양종민, 2022)<sup>3)</sup>. 또한 시계열 자료의 특성상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합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정확한 통계적 추론을 위해 클러스터 분산추정량을 적용하였다(한치록, 2021). 이를 통해 동일 가구 내 응답 간 상관성과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허용하면서도 가구 간 독립성 가정은 유지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적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2. 변수의 구성

###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채 용도별 비율과 영역별 복지지출 확대 의향이다. 우선 부채 용도별 비율의 경우 가구용 설문지에서 "다음 각각의 항목별 부채에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생활비(생계비), ② 주택 관련 자금(전월세보증금 포함), ③ 교육(학자금대학 포함), ④ 의료비, ⑤ 빚 갚음, ⑥ 기타의 6개 용도별로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항목을 제외한 생활비, 주택 관련 자금, 교육, 의료비, 빚 갚음의 5개 용도별 비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영역별 복지지출 확대 의향은 "다음에 열거된 각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든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지출 확대 또는 축소 의향을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 확대 시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었다.<sup>4)</sup> 분석 대상 영역은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기초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의 6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은 사회보험형 지출의 성격을 지니며, 빈곤층·노인·장애인 생활지원은 재분배형 지출의 특성을 갖는다.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지출 확대 의향이 큰 것으로 해석되도록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저소득층 여부이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을 의도적으로 과대표집하여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 대상 정책 연구나 빈곤 관련 분석에 최적화된 자료적 특성을 제공한다(이태진 외, 2024).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로 정의되며,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소득 수준 미만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그 이상 가구를 일반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패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임의효과 모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방법은 동일 패널의 가중치가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연도별로 상이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과대표집을 적절히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 적용이 필수적 이므로 통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채택하였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Random Effects 모형을 추가로 실행하여 미관측 이질성 통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2개 연도의 제한된 기간으로 인해 개체 내 변화(within variation)가 충분하지 않아 RE 모형이 유사한 결과를 제공함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통합 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해당 Random Effects 모형의 분석 결과는 필요시 저자에게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

4) 원래 문항에는 "선택할 수 없음"이라는 응답 옵션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는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선호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응답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다. 통제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부채 용도별 비율과 영역별 복지지출 확대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의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우선 소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자산은 소유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소유부동산은 거주주택의 가격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을 의미한다. 거주주택 가격과 관련하여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을,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가격을 의미한다.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기타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부채는 가계부채의 총액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 자산, 부채의 경우 분포의 편향성(skewness)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로그값으로 변환을 하였다.<sup>5)</sup>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다. 연령집단은 19세부터 34세를 청년층, 35세부터 49세를 중년층, 50세부터 64세를 장년층,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했다. 교육수준은 9점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경제활동 지위는 상용직을 기준범주로 하여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 자리를 임시직 범주로, 고용주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 범주로,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인구를 실업 및 비경활 범주로 코딩하였다. 혼인유무와 관련하여 유배우를 1로 나머지 범주를 0으로 코딩하였다. 정치성향은 '매우 진보적(1)'부터 '매우 보수적(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변수의 내용과 측정 방식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변수의 측정

변수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	부채 용도별 비율
	총 부채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① 생활비, ② 주택 관련 자금, ③ 교육, ④ 의료비, ⑤ 빚 갚음)
	복지지출 확대의향
	5점 척도(훨씬 덜 지출 ~ 훨씬 더 많이 지출)
독립변수	저소득층 여부
	일반가구=0, 저소득층=1
통제변수	소득
	가처분소득(logged)
	자산
	자산총액(logged)
	부채
	부채총액(logged)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집단
	청년층(19~34)=0, 중년층(35~49)=1, 장년층(50~64)=2, 노년층(65세 이상)=3
	교육수준
	9점 척도
	경제활동 지위
	상용직(0), 임시직(1), 자영업(2), 실업 및 비경활(3)
	혼인유무
	그 외=0, 유배우=1
	정치이념
	5점 척도(매우 진보적 ~ 매우 보수적)

## IV.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부채 용도별 비율의 경우 주택 관련 자금이 평균

5) 소득변수에서는 자연로그 변환 시 음수나 0인 값이 제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소득에 1을 추가한 후 최솟값을 차감하였다.

51.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 관련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생활비는 평균 14.11%를 차지하며, 교육(1.43%), 의료비(0.80%), 빚 갚음(0.8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복지지출 확대 의향 측면에서는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2.86점), 국민연금(2.81점) 등 사회보험형 지출에 대한 확대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생활지원(2.42점), 빈곤층 생활지원(2.58점) 등 재분배형 지출에 대한 의향은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표본 구성을 보면 저소득층이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중년층(35.16%)과 장년층(31.63%)이 주를 이루고 있고, 경제활동 지위에서는 상용직(30.76%)과 임시직(24.78%)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층의 비율이 적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부채 접근성이 일반가구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히려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부채 활용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복지인식 부가조사 전체 참여자 4,854명 중 저소득층이 22.1%를 차지했으나, 부채 보유 가구로 한정할 경우 12%로 감소한 것은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 제약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를 통해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으며,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을 통해 모집단에 대한 추론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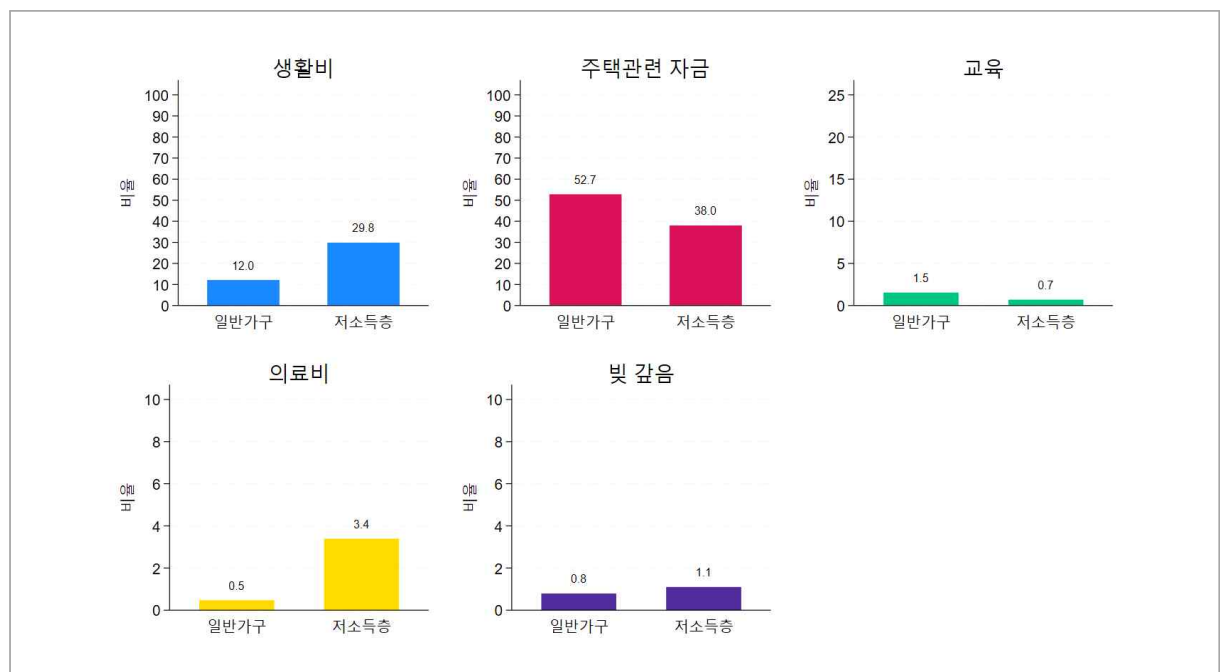
표 2.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표본수	평균(비율)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부채 용도별 비율	생활비	2,775	14.11	31.53	0	100
	주택 관련 자금	2,775	51.04	45.70	0	100
	교육	2,775	1.43	10.47	0	100
	의료비	2,775	0.80	7.82	0	100
	빚 갚음	2,775	0.83	8.29	0	100
복지지출 확대 의향	건강보험 및 보건	2,764	2.66	0.82	1	5
	국민연금	2,753	2.81	0.83	1	5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2,755	2.86	0.89	1	5
	빈곤층 생활지원	2,762	2.58	0.84	1	5
	노인 생활지원	2,759	2.60	0.83	1	5
	장애인 생활지원	2,762	2.42	0.80	1	5
저소득층 여부	2,776	0.12	0.32	0	1	
소득(logged)	2,776	10.48	0.30	0	12.20	
자산(logged)	2,775	8.74	2.32	0	13.64	
부채(logged)	2,776	8.53	1.44	2.40	12.84	
성별	2,776	0.55	0.50	0	1	
연령집단	2,776			0	3	
청년층	479	17.26				
중년층	976	35.16				
장년층	878	31.63				
노년층	443	15.96				
교육수준	2,776	5.57	1.35	2	9	
경제활동 지위	2,776			0	3	
상용직	854	30.76				

변수	표본수	평균(비율)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임시직	688	24.78			
자영업	433	15.6			
실업 및 비경활	801	28.85			
혼인유무	2,776	0.71	0.45	0	1
정치이념	2,581	2.94	0.91	1	5

가구유형별 부채 용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주택 관련 자금의 경우 일반가구가 52.7%를 차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38.0%로 14.7%p 낮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주택 관련 부채 접근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반대로 생활비 부채는 저소득층이 29.8%로 일반가구의 12.0%보다 17.8%p 높아, 저소득층이 일상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부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비 부채 역시 저소득층이 3.4%로 일반가구의 0.5%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부채와 빚 갚음 부채는 두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저소득층이 일반가구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이 투자성 부채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비성 부채에 더 많이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1. 가구유형별 부채 용도별 비율 비교



## 2. 회귀분석 결과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부채 용도별 비율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저소득층은 일반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채 비율이 12.76%p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1$ ),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반면 주택 관련 자금 부채 비율은 16.77%p 낮게 나타나( $p < 0.001$ ) 저소득층의 주택 관련 부채 접근성이 현저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의료비 부채의 경우 저소득층이 2.32%p 높아( $p < 0.05$ ) 의료비 부담이 부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대명 외(2017)와 현대경제연구원(2024)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 투자 목적보다는 생계비와 생활 유지를 위한 부채에 의존하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자산과 부채 규모가 부채 용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생활비(-2.34%p)와 주택 관련 자금(-3.32%p) 부채 비율이 모두 감소하는 반면, 부채 규모가 클수록 생활비 비율은 감소(-6.17%p)하고 주택 관련 자금 비율은 증가(6.28%p)하는 상반된 패턴을 보였다. 경제 활동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상용직에 비해 생활비 부채 비율이 6.42%p 높게 나타나( $p < 0.01$ ), 자영업자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로 인한 생활비 부채 의존성이 확인되었다. 연령대별로는 장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주택 관련 자금 비율이 13.27%p 낮게 나타나, 생애주기별 부채 활용 양상의 차이도 확인되었다. 이는 김수현, 황설웅(202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과 자산이 높은 가계일수록 주택 취득을 위한 레버리지 기회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는 주택마련을 위한 부채 증가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부채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 가구유형별 부채 용도별 비율 회귀분석 결과

	생활비	주택 관련 자금	교육	의료비	빚 갚음
저소득층 여부(ref.= 일반 가구)	12.760*** (3.382)	-16.769*** (4.150)	0.196 (0.907)	2.319* (0.946)	0.047 (0.817)
소득(logged)	1.282 (1.413)	4.452 (3.564)	0.576 (1.519)	0.147 (0.284)	-0.527 (0.534)
자산(logged)	-2.340*** (0.352)	-3.315*** (0.565)	-0.034 (0.083)	0.088 (0.103)	-0.044 (0.089)
부채(logged)	-6.167*** (0.630)	6.276*** (0.835)	-0.887*** (0.205)	-0.432* (0.201)	-0.051 (0.132)
성별	0.805 (1.353)	2.433 (2.373)	0.372 (0.413)	-0.226 (0.297)	0.058 (0.344)
연령집단(ref.= 청년층)					
중년층	-1.045 (2.050)	-6.158+ (3.607)	-1.810* (0.812)	0.084 (0.330)	0.530 (0.577)
장년층	1.499 (2.248)	-13.268*** (3.993)	-0.396 (0.750)	0.333 (0.365)	0.921 (0.683)
노년층	-1.498 (3.229)	-8.100 (5.044)	-1.251* (0.563)	-1.278* (0.586)	0.062 (0.653)
교육수준	1.138+ (0.654)	-0.900 (1.106)	0.757* (0.318)	-0.366** (0.128)	-0.026 (0.115)
경제활동 지위(ref.=상용직)					
임시직	0.886 (1.721)	-3.973 (3.055)	-0.003 (0.661)	-0.168 (0.458)	0.174 (0.461)
자영업	6.416** (2.178)	-5.438 (3.651)	-0.174 (0.557)	-0.139 (0.509)	-0.206 (0.318)
실업 및 비경활	1.527 (1.773)	-3.703 (3.079)	-1.096+ (0.566)	-0.183 (0.351)	0.526 (0.597)
혼인유무(ref.=그 외)	0.206 (1.645)	6.937* (3.106)	-0.728 (0.452)	0.073 (0.345)	-0.986* (0.492)
연도(ref.=2019)					
2022	3.730***	5.301**	-0.455	0.155	-0.235

	생활비	주택 관련 자금	교육	의료비	빚 갚음
	(1.100)	(1.874)	(0.352)	(0.230)	(0.367)
상수	61.548***	-12.549	0.649	4.106	7.411
	(15.924)	(38.430)	(15.871)	(3.690)	(5.838)
사례수	2,699	2,699	2,699	2,699	2,699
R2	0.189	0.073	0.032	0.024	0.006

\*\*\* $p < 0.001$ , \*\* $p < 0.01$ , \* $p < 0.05$ , + $p < 0.1$ .

그다음으로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부채 용도별 비율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생활비, 주택 관련 자금, 의료비 부채 비율과 가구유형 간 상호작용효과가 복지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그림 2]부터 [그림 4]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림 2]부터 [그림 4]는 각 상호작용효과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시각화한 그래프로, 생활비·주택 관련 자금·의료비 부채 비율 구간별로 일반가구와 저소득층의 복지지출 확대 의향 예측값 및 95% 신뢰구간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참고로 본 연구의 모든 회귀분석 추정치와 통계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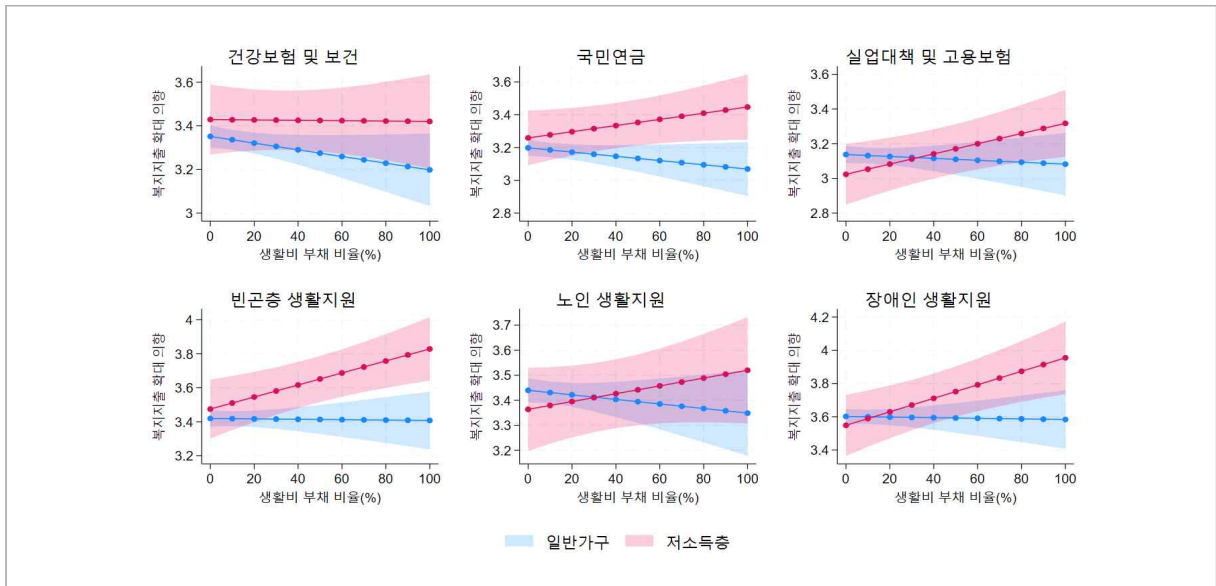
우선 생활비 부채비율과 가구유형의 상호작용 효과와 영역별 복지지출 확대 의향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그림 2]와 <부표 1>과 같이 저소득층은 생활비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복지영역에서 지출 확대 의향이 일반가구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국민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영역에서 상호작용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값을 보여, 생활비 부채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이들 사회보험·재분배형 지출 확대 의향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함을 시사한다. 반면 건강보험 및 보건과 노인 생활지원 영역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Wiedemann(2021)이 제시한 ‘신용시장의 보험효과와 사유화 효과’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생활비 부채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이 사회보험(국민연금·실업대책·고용보험)과 재분배형(빈곤층·장애인 생활지원) 복지지출 확대 의향을 더 강하게 보인 것은, 소비부채 증가가 채무자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을 높여 공적 안전망 강화 요구를 자극하는 ‘부채-위험(debt-as-risk)’ 경로와 일치한다. 즉, 생활비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은 소득 충격을 사적 보험으로 흡수하기 어려워 강력한 공적 사회보험(insurance effect)을 요구하며, 투자부채 대신 소비부채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유화 효과(privatization effect)와도 구별되는 복지수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김항기, 권혁용(2017)이 가계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분배 정책 지지가 강화되는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를 확인한 점과, 양종민(2022)이 부채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보험·재분배 전방위 찬성’ 유형 소속 확률이 높아진다는 잠재집단 분석 결과를 한층 구체화한다. 본 연구는 특히 부채를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용도별 비율로 세분화하고, 소득계층(저소득층 vs. 일반가구)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전체 가계부채 규모나 단일 지표에 주목했던 한계를 보완한다. 즉, 소비부채 중에서도 생활비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서만 사회보험·재분배형 복지수요가 유의미하게 증폭된다는 사실은,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성격과 가구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 관련 자금 부채 비율과 가구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는 모든 복지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아지더라도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에 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대책 및 고용보험·빈곤층·노인·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한 지출 확대 의향 변화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관련 자금 부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채 용도 중 소비부채(생활비 대출)와 달리 비교적 제한적임을 시사하며, 부채-복지태도 관계를 논할 때는 부채의 성격과 용도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투자·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부채’로 분류되어, 채무자가 이를 통해 주택 자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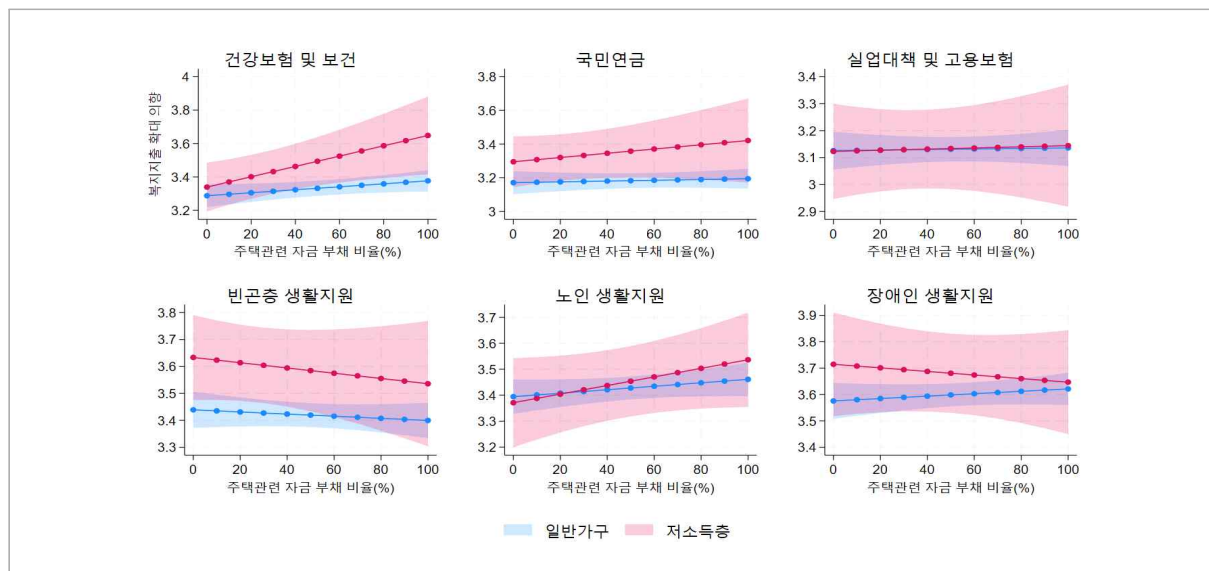
추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적 자원이 강화돼 공적 복지 수요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약해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고정적 대출 상환 부담이 심화되어도 이자 비용이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부채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위험 회피를 위한 사회보험 강화 요구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의 심사와 규제 요건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소득계층 간 접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보다 대체로 유사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복지태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2. 생활비 부채 비율과 가구유형의 상호작용과 복지지출 확대 의향 간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주: 자세한 통계분석 결과는 <부표 1>을 참조.

그림 3. 주택 관련 자금 부채 비율과 가구유형의 상호작용과 복지지출 확대 의향 간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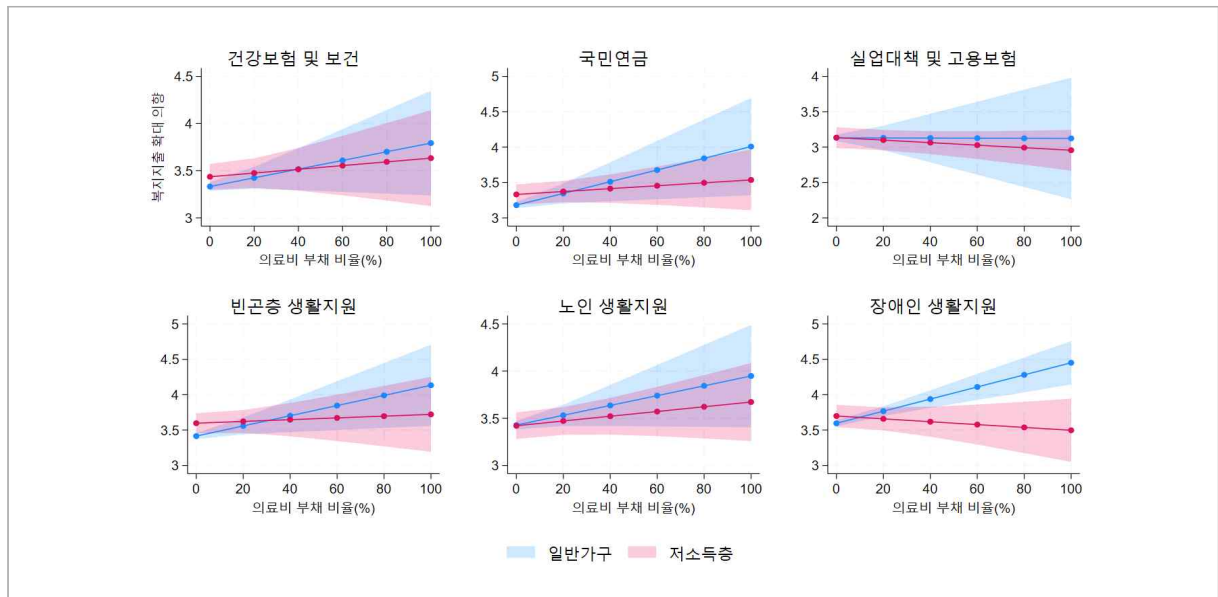
주: 자세한 통계분석 결과는 <부표 2>를 참조.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채 비율과 가구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림 4]와 <부표 3>과 같이 대부분의 복지영역에서 상호작용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건강보

험·보건, 국민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영역에서는 의료비 부채가 증가해도 두 집단의 복지지출 확대 의향 변화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생활지원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상호작용 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 의료비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일반가구는 장애인 생활지원 확대 의향이 상승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의료비 부채가 증가할 때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복지수요 반응의 차이가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와 함께 '가용성 효과(salience effect)'로도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가구에겐 의료비 부채 경험은 건강 충격과 장애 위험에 대한 heightened salience)을 초래하여, 특히 장애인 돌봄이라는 직접적 의료비 지출과 연결된 복지영역에 대해 더 적극적인 지출 확대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일반가구는 현재의 의료비 부채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미래의 잠재적 장애 위험에 대한 공적 보장 강화를 지지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채 증가 시 부채 상환 압박으로 인해 한정된 가용 자원을 생계비·주거비 등 긴급 지출에 우선 투입해야 하므로, 장애인 지원과 같은 특화된 복지영역보다는 보편적 사회보험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저소득층에게는 당장의 생존 부채 압박이 과중하여 타 영역(장애 지원)으로의 복지 연대성을 확장할 여력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구의 재정적 여력과 부채 상환 부담의 차이가 복지정책 수요의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의료비 부채라는 경험이 계층별로 다른 심리적 반응과 인식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의료비 부채 증가가 장애인 생활지원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계층별로 상반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 의료비 부채 비율과 가구유형의 상호작용과 복지지출 확대 의향 간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주: 자세한 통계분석 결과는 <부표 3>을 참조.

본 연구에서 의료비 부채 비율이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해서만 계층별 상반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결과는 구성비 데이터(compositional data)의 구조적 특성과 기회비용 관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다. 부채 용도별 비율이 합이 100%가 되는 구성비 데이터의 특성상, 의료비 부채 비율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생활비나 주택 관련 자금 부채 비율의 감소를 동시에 의미하며, 이는 순수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넘어 구조적 공선성(structural collinearity)을 내포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의료비 부채 비율의 증가는 단순한 부채 용도의 재구성이 아니라 자산 형성을 위한 레버리지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에서 의료비 부채가 높아질수록

생활비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의료 충격이 긴급 생활비 조달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주택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부채 접근성을 더욱 제약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채 증가 시 장애인 생활 지원 의향에서 오히려 감소 경향을 보인 결과는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한된 자원 배분 속에서 부채 상환과 생계 유지 간 우선순위 경쟁이 심화되는 '빈곤의 고착화 메커니즘'을 반영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용도별 구성이 소득계층별로 이질적이며, 부채의 용도 비율 변화가 단순한 금융 선택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구조적 불평등 과정임을 보여줄 수 있다.

## V. 결론 및 함의

오늘날 복지국가는 전통적 '사회적 시민권'이 금융화된 '시장 시민권'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위험 관리는 점차 사적 부채 의존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층별 부채 용도와 복지태도 간의 상이한 관계를 초래하며, 특히 생활비·주택자금·의료비 부채 비율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의향의 계층별 차이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저소득층과 일반가구가 어떤 부채 용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부채 부담을 지니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들 부채 용도 비율이 가구유형과 상호작용하여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부채와 투자부채가 복지정책 선호에 미치는 상반된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계층별 부채-위험 인식이 복지수요 형성에 미치는 미시적 경로를 밝혀내고자 했다.

가구유형별 부채 용도 비율 분석 결과, 저소득층은 일상적 생계 유지와 의료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한 소비성 부채에 집중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주택 구입 등 투자성 부채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교육이나 기존 부채 상환을 위한 차입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이들이 사적 금융을 생계와 건강유지 목적에 우선 활용한다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다.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패턴을 뒷받침하며, 저소득층이 소비성 부채 용도에서 일반가구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투자성 부채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특히 저소득층이 일반가구에 비해 의료비 부채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건강 위기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가용 자원이 제한된 저소득층은 부채를 주요한 비용 조달 수단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빚을 지는 금융 행위를 넘어, 가계가 예상치 못한 질병·사고 등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부채의 용도별 차이는 따라서 가구의 위험 관리 전략과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요한 배경 맥락을 제공하며, 복지정책 설계 시 이러한 재정적 대응 방식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부채 용도별 비율 차이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비성 부채(생활비·의료비 등)의 상호작용 효과는 저소득층의 복지지출 확대 의향을 강하게 자극하는 반면, 투자성 부채(주택 관련 자금)의 상호작용 효과는 거의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생활비 부채가 증가할 때 저소득층은 사회보험형(국민연금·실업대책 등) 및 재분배형(빈곤층·장애인 지원 등) 복지영역에서 일반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지출 확대 의향을 보였다. 이는 '부채-위험(debt-as-risk)' 관점에서, 소비부채가 개인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공적 안전망 강화 요구로 이어진다는 메커니즘을 구체화한 결과다. 반면 주택 관련 자금 부채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든 복지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투자성 부채가 복지선호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의료비 부채의 경우에도 전반적 복지태도 확대가 두드러졌지만, 장애인 생활지원에서는 오히려 일반가구의 지출 확대 의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逆)상관 패턴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적 상호작용 효과는 부채의 성격과 용도가 복지정책 수요의 우선순위와 민감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하며, 복지국가가 계층별 재정 취약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험 관리 전략을 설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가계부채의 총규모나 단일 지표에 집중해 온 한계를 넘어, 부채를 목적별로 구분하고 소득계층(저소득층·일반가구)에 따른 부채 용도 비율 차이를 엄밀히 실증했다는 점에서 기여한다. 또한 단편적 부채-복지태도 관계를 넘어, 부채 용도 비율이 가구유형과 상호작용하여 복지수요 패턴을 어떻게 달리 형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부채-위험(debt-as-risk) 및 신용시장 이중효과 이론을 한국 맥락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소비성 부채와 투자성 부채가 복지태도에 상이하게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복지정책 설계 시 계층별·용도별 맞춤형 위험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생활비 부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책금융 기관의 저금리 대출 한도 확대, 의료비 부채 선지급 시스템 도입, 소득계층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차별화 등이 필요하며, 이는 부채의 성격에 따라 위험 노출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정책설계를 의미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연체 데이터와 복지 부서의 정보를 연계하는 '금융-복지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이 부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사회보험과 재분배형 복지로 자동 연계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저소득층이 소비성 부채로 인한 미래 소득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 공적 복지 수요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둘째, 이 연구는 복지국가 이론의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사회보험과 재분배를 통해 개인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고 평등주의적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Esping-Andersen, 1999). 하지만 금융화가 심화된 오늘날, 가계는 의료비·생활비 등 일상적 위험을 공적 안전망이 아니라 사적 부채를 통해 흡수하며 '시장 시민권'의 영역으로 위험 관리가 이관되고 있다(Bobek et al., 2023). 본 연구는 부채 용도별 비율과 가구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소비성 부채(생계·의료비)가 공적 복지 수요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성 부채(주택자금)는 복지태도와 결합되지 않음을 실증했다. 이는 신용시장의 보험효과와 사유화 효과가 복지국가 기능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드러내며, 금융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 전략을 이론적으로 보완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금융화 시대에 가계의 사적 대응 전략이 복지수요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정책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신용 접근성과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저소득층이 생활비·의료비 등 필수 비용을 부채로 충당하는 현실을 반영해, 긴급생계비 대출 상환 유예·저금리 의료비 대출 프로그램 도입·의료비 선지급 시스템 강화 등 '부채 안전망(debt safety net)'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성 부채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공적 복지 수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대명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는 생계형 또는 소비형 부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활비가 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은 단순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들의 경제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부터 거리가 있었으며, 저금리 대출상품 제공과 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성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가 대출이 아닌 부채 탕감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가처분소득을 공적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으로 자동 연계하는 통합적 안전망 시스템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저소득층의 진정한 자활기반 조성과 빈곤 악순환 탈출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자산과 부채를 로그 변환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한 것은 두 변수의 비대칭성을 부분적으로 해결하였으나, 저소득층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자산(net assets)이 음(-)인 상태가 빈번히 관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통제하였지만, 순자산 상태, 즉 자산 대비 부채의 건전성(asset-to-debt ratio) 자체가 저소득층의 재무적 곤궁(financial distress)과 복지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특히 순자산이 음(-)인 가구와 양(+ )인 가구 간에는 단순한 부채 비율의 차이를 넘어 구조적으로 이질적인 재무상황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형성 과정에서 '임계값(threshold effec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순자산 상태에 따른 계층 내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예를 들어, 순자산 음수 여부를 조절변수로 포함하거나, 부채-자산 비율 등의 건전성 지표를 직접 투입)을 개발함으로써, 자산기반 빈곤 연구로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종민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비교복지국가 연구, 복지태도, 사회불평등, 플랫폼 노동이다.

(E-mail: [jmyang@inha.ac.kr](mailto:jmyang@inha.ac.kr))

## 참고문헌

- 김도균. (2018).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영순,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211-240.
- 김지원, 채황석. (2025). 자산경제 시대의 청년정책-서울 청년의 부채 비율이 청년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과 자가 소유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학*, 77(1), 175-205.
- 김항기, 권혁용. (2017). 부동산과 복지국가: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 *한국정치학회보*, 51(1), 261-285.
- 김수현, 황설웅. (2023).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BOK 경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 박창균, 박상금, 한솔희, 김솔희. (2017).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 부채 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안상훈, 김영미, 김수완. (2021). 한국인의 복지태도: 균열구조의 형성과 변화. *보건사회연구*, 41(1), 42-60.
- 양종민. (2022). 사적 자산축적 수준은 복지인식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2), 65-84.
- 이래혁, 이재경. (2018). 저소득 여성 독거노인의 물질적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3(4), 29-53.
- 이민호. (2021). 한국 복지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1), 103-131.
- 이왕원, 최을, 김문조. (2016). 한국 저소득층 가구의 빈곤화 과정에 관한 연구\*-자기회귀교차지연 (ARCL) 모형을 통한 다중박탈 양상의 종단적 분석. *가족과 문화*, 28(1), 162-206.
- 이재경, 이래혁, 이은정, 장혜림. (2016). 저소득층의 자살생각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을 중심으로: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3), 181-201.
- 이철승, 황인혜, 임현지. (2018).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자산 불평등, 보험욕구, 복지 선호도, 2007-2016. *한국정치학회보*, 52(5), 1-30.
- 이태진, 류진아, 강예은, 남윤재, 신재동, 정주성, 정유림, 송지은, 이원진, 이봉주, 강상경, 박정민, 정원오, 임은정, 김건, 김태형. (2024).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치록. (2021). *패널데이터 강의*. 박영사
- 현대경제연구원. (2024). 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2022년 대비). *경제주평*, 24-10(통권 968호).
- Bobek, A., Mikuš, M., & Sokol, M. (2023). Making sense of the financialization of households: state of the art and beyond. *Socio-Economic review*, 21(4), 2233-2258.
- Crouch, C. (2009). Privatised Keynesianism: An unacknowledged policy regime.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1(3), 382-399.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Finlayson, A. (2009). Financialisation, financial literacy and asset-based welfare.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1(3), 400-421.
- Fligstein, N., & Goldstein, A. (2015). The emergence of a finance culture in American households, 1989-8211;2007. *Socio-Economic Review*, 13(3), 575-601.
- Hacker, J. S. (2019). *The great risk shift: The new economic insecurity and the decline of the American dream*. Oxford University press.
- Krippner, G. R. (2012). *Capitalizing on crisis: The political origins of the rise of fin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Langley, P. (2008). *The everyday life of global finance: Saving and borrowing in Anglo-America*. OUP Oxford.
- Lin, K. H., & Neely, M. T. (2020). *Divested: Inequality in the age of fi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R. (2002).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Temple University Press.

- Primo, D. M., Jacobsmeier, M. L., & Milyo, J. (2007). Estimating the impact of state policies and institutions with mixed-level data.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7(4), 446-459.
- Thelen, K. (2014). *Varieties of liberalization and the new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lace, C. (2002). Household strategies: their conceptual relevance and analytical scope in social research. *Sociology*, 36(2), 275-292.
- Wiedemann, A. (2021). *Indebted societies: Credit and welfare in rich democrac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edemann, A. (2022). How credit markets substitute for welfare states and influence social policy preferences: evidence from US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2), 829-849.

부록

부표 1. 생활비 부채비율과 가구유형의 상호작용과 복지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저소득층 여부(ref.= 일반 가구)	0.077 (0.088)	0.061 (0.090)	-0.114 (0.093)	0.056 (0.092)	-0.076 (0.088)	-0.053 (0.097)
생활비 부채비율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001)	-0.000 (0.001)
저소득층 여부(ref.= 일반 가구) X 생활비 부채비율	0.001 (0.002)	0.003* (0.001)	0.003* (0.002)	0.004* (0.002)	0.002 (0.002)	0.004** (0.002)
소득(logged)	-0.062 (0.056)	0.015 (0.049)	-0.001 (0.069)	0.042 (0.060)	0.134+ (0.074)	0.121+ (0.063)
자산(logged)	-0.051*** (0.010)	-0.034** (0.011)	-0.037*** (0.011)	-0.018 (0.012)	-0.031** (0.010)	-0.031** (0.011)
부채(logged)	0.018 (0.017)	-0.001 (0.017)	-0.019 (0.018)	-0.013 (0.017)	0.017 (0.017)	0.019 (0.016)
성별	-0.112* (0.046)	-0.078+ (0.046)	-0.133** (0.047)	-0.115* (0.048)	-0.161** (0.049)	-0.057 (0.047)
연령집단(ref.= 청년층)						
중년층	0.013 (0.086)	0.056 (0.081)	-0.125+ (0.073)	-0.023 (0.072)	0.044 (0.073)	0.060 (0.067)
장년층	0.091 (0.085)	0.182* (0.083)	-0.153+ (0.080)	0.003 (0.078)	0.039 (0.080)	0.042 (0.073)
노년층	0.070 (0.100)	0.200* (0.097)	-0.131 (0.098)	-0.007 (0.094)	0.134 (0.097)	0.124 (0.096)
교육수준	0.037+ (0.020)	0.005 (0.019)	-0.013 (0.021)	0.021 (0.019)	0.015 (0.019)	0.028 (0.019)
경제활동 지위(ref.=상용직)						
임시직	0.025 (0.058)	-0.020 (0.057)	0.020 (0.064)	0.011 (0.060)	-0.072 (0.061)	-0.026 (0.061)
자영업	-0.136+ (0.077)	-0.189** (0.063)	-0.183* (0.077)	-0.166* (0.081)	-0.201** (0.073)	-0.089 (0.066)
실업 및 비경활	-0.005 (0.070)	-0.105 (0.068)	-0.093 (0.062)	-0.034 (0.060)	-0.109+ (0.060)	-0.003 (0.061)
혼인유무(ref.=그 외)	-0.014 (0.069)	-0.023 (0.063)	-0.091 (0.061)	-0.111+ (0.063)	-0.138* (0.061)	-0.102+ (0.056)
정치이념	-0.111*** (0.024)	-0.104*** (0.025)	-0.122*** (0.027)	-0.116*** (0.023)	-0.072** (0.024)	-0.112*** (0.023)
연도(ref.=2019)						
2022	-0.046 (0.041)	0.039 (0.041)	-0.015 (0.043)	0.002 (0.040)	0.059 (0.040)	0.027 (0.038)
상수	4.463*** (0.622)	3.624*** (0.536)	4.375*** (0.725)	3.634*** (0.671)	2.460** (0.794)	2.660*** (0.681)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사례수	2,507	2,502	2,496	2,502	2,502	2,504
R2	0.049	0.040	0.058	0.046	0.040	0.037

\*\*\* $p < 0.001$ , \*\* $p < 0.01$ , \* $p < 0.05$ , + $p < 0.1$ .

**부표 2. 주택 관련 자금 부채비율과 가구유형의 상호작용과 복지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저소득층 여부(ref.= 일반 가구)	0.052 (0.084)	0.124 (0.086)	-0.003 (0.097)	0.194* (0.088)	-0.023 (0.094)	0.139 (0.107)
생활비 부채비율	0.001+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1 (0.000)	0.000 (0.000)
저소득층 여부(ref.= 일반 가구) X 생활비 부채비율	0.002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소득(logged)	-0.067 (0.056)	0.023 (0.048)	0.012 (0.071)	0.062 (0.060)	0.138+ (0.075)	0.140* (0.065)
자산(logged)	-0.044*** (0.011)	-0.031** (0.011)	-0.037*** (0.011)	-0.021+ (0.012)	-0.027** (0.010)	-0.031** (0.012)
부채(logged)	0.019 (0.016)	0.002 (0.016)	-0.019 (0.018)	-0.012 (0.016)	0.016 (0.017)	0.015 (0.016)
성별	-0.117* (0.046)	-0.080+ (0.047)	-0.135** (0.047)	-0.114* (0.048)	-0.165*** (0.049)	-0.059 (0.047)
연령집단(ref.= 청년층)						
중년층	0.019 (0.086)	0.057 (0.081)	-0.127+ (0.073)	-0.027 (0.073)	0.048 (0.073)	0.062 (0.068)
장년층	0.103 (0.085)	0.186* (0.083)	-0.151+ (0.080)	0.000 (0.079)	0.049 (0.080)	0.051 (0.074)
노년층	0.063 (0.099)	0.187+ (0.098)	-0.143 (0.098)	-0.022 (0.096)	0.127 (0.097)	0.115 (0.098)
교육수준	0.036+ (0.020)	0.004 (0.019)	-0.013 (0.021)	0.022 (0.019)	0.015 (0.019)	0.029 (0.019)
경제활동 지위(ref.=상용직)						
임시직	0.026 (0.058)	-0.022 (0.057)	0.019 (0.064)	0.006 (0.060)	-0.071 (0.061)	-0.027 (0.061)
자영업	-0.136+ (0.077)	-0.190** (0.063)	-0.181* (0.076)	-0.163* (0.080)	-0.199** (0.072)	-0.082 (0.065)
실업 및 비경활	-0.004 (0.069)	-0.107 (0.068)	-0.094 (0.062)	-0.037 (0.060)	-0.109+ (0.060)	-0.003 (0.061)
혼인유무(ref.=그 외)	-0.021 (0.070)	-0.028 (0.063)	-0.095 (0.061)	-0.113+ (0.064)	-0.144* (0.062)	-0.110+ (0.056)
정치이념	-0.112*** (0.024)	-0.106*** (0.025)	-0.123*** (0.027)	-0.116*** (0.023)	-0.073** (0.024)	-0.112*** (0.023)

연도(ref.=2019)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2022	-0.057 (0.041)	0.033 (0.041)	-0.017 (0.043)	0.004 (0.040)	0.051 (0.040)	0.024 (0.039)
상수	4.403*** (0.618)	3.476*** (0.534)	4.226*** (0.742)	3.477*** (0.671)	2.358** (0.799)	2.465*** (0.696)
사례수	2,507	2,502	2,496	2,502	2,502	2,504
R2	0.051	0.039	0.057	0.044	0.040	0.034

\*\*\* $p < 0.001$ , \*\* $p < 0.01$ , \* $p < 0.05$ , + $p < 0.1$ .

**부표 3. 의료비 부채비율과 가구유형의 상호작용과 복지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저소득층 여부(ref.= 일반 가구)	0.103 (0.076)	0.151+ (0.078)	0.003 (0.079)	0.182* (0.077)	-0.006 (0.075)	0.103 (0.084)
생활비 부채비율	0.005 (0.003)	0.008* (0.004)	-0.000 (0.004)	0.007* (0.003)	0.005+ (0.003)	0.009*** (0.002)
저소득층 여부(ref.= 일반 가구) X 생활비 부채비율	-0.003 (0.004)	-0.006 (0.004)	-0.002 (0.005)	-0.006 (0.004)	-0.003 (0.003)	-0.011*** (0.003)
소득(logged)	-0.057 (0.056)	0.028 (0.048)	0.014 (0.071)	0.060 (0.060)	0.144+ (0.077)	0.142* (0.067)
자산(logged)	-0.048*** (0.010)	-0.033** (0.011)	-0.037*** (0.011)	-0.020+ (0.012)	-0.030** (0.010)	-0.034** (0.011)
부채(logged)	0.028+ (0.017)	0.008 (0.017)	-0.018 (0.018)	-0.012 (0.016)	0.023 (0.017)	0.021 (0.016)
성별	-0.112* (0.046)	-0.076 (0.047)	-0.134** (0.047)	-0.113* (0.048)	-0.160** (0.049)	-0.054 (0.047)
연령집단(ref.= 청년층)						
중년층	0.015 (0.086)	0.058 (0.081)	-0.127+ (0.073)	-0.023 (0.072)	0.045 (0.073)	0.061 (0.067)
장년층	0.091 (0.085)	0.184* (0.083)	-0.152+ (0.080)	0.007 (0.078)	0.040 (0.080)	0.047 (0.073)
노년층	0.074 (0.099)	0.200* (0.097)	-0.144 (0.098)	-0.013 (0.095)	0.133 (0.097)	0.116 (0.096)
교육수준	0.037+ (0.020)	0.007 (0.019)	-0.013 (0.021)	0.024 (0.019)	0.016 (0.019)	0.031 (0.019)
경제활동 지위(ref.=상용직)						
임시직	0.022 (0.058)	-0.022 (0.057)	0.018 (0.064)	0.010 (0.060)	-0.074 (0.061)	-0.027 (0.061)
자영업	-0.142+ (0.077)	-0.190** (0.063)	-0.182* (0.076)	-0.159* (0.080)	-0.201** (0.073)	-0.081 (0.065)
실업 및 비경활	-0.007 (0.069)	-0.106 (0.068)	-0.095 (0.061)	-0.034 (0.060)	-0.110+ (0.060)	-0.004 (0.061)
혼인유무(ref.=그 외)	-0.018 (0.069)	-0.030 (0.063)	-0.095 (0.061)	-0.118+ (0.063)	-0.142* (0.061)	-0.110* (0.056)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정치이념	-0.114*** (0.024)	-0.108*** (0.025)	-0.123*** (0.027)	-0.118*** (0.023)	-0.075** (0.024)	-0.114*** (0.023)
연도(ref.=2019)						
2022	-0.052 (0.041)	0.034 (0.041)	-0.016 (0.043)	0.001 (0.040)	0.055 (0.040)	0.026 (0.038)
상수	4.298*** (0.615)	3.389*** (0.529)	4.218*** (0.743)	3.455*** (0.666)	2.292** (0.814)	2.440*** (0.714)
사례수	2,507	2,502	2,496	2,502	2,502	2,504
R2	0.048	0.041	0.057	0.045	0.040	0.037

\*\*\* $p < 0.001$ , \*\* $p < 0.01$ , \* $p < 0.05$ , + $p < 0.1$ .

# Purpose-Specific Debt Shares and Welfare Attitudes: Differences in Debt Purpose Shares between Low-Income and General Households and the Effects of Household Type and Debt Purpose Shares on Welfare Attitudes

Yang, Jongmin<sup>1</sup>

<sup>1</sup> Inha University

## | Abstract |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the share of household debt by purpose and its interaction with income groups affect welfare attitudes in the context of a financialized welfare state,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First, we observe that low-income households rely primarily on consumption debt (living and medical expenses), whereas general households carry a larger share of investment debt (housing loans). Next, we analyze how the interaction between household type and debt purpose shares shapes willingness to expand welfare spending. The results show that as consumption debt increases, low-income households show a stronger preference for both social insurance (pension and unemployment benefits) and redistributive programs (support for the poor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investment debt shares exhibit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verall welfare attitudes. Although medical debt shares are generally insignificant, a reverse pattern appears in attitudes toward disability support, where support among general households slightly increas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nature and purpose of debt are key pathways shaping welfare demand and highlight the need for debt safety nets and tailored risk-management strategies by income group.

**Keywords:** Household Debt Purpose, Low-Income Households, Consumption Debt, Investment Debt, Welfare Attitudes